

# Issue & Focus

Hansun Foundation

## 한반도 정전(停戰) 60주년

-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평화관리, 통일준비가 급선무다 -

조성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한반도 정전(停戰) 60주년

-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평화관리, 통일준비가 급선무다 -



조성환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우리는 6·25전쟁의 정전 60주년을 맞는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북한은 전승(戰勝)을 기치(旗幟)로 대중동원을 벌이고, 남한에 대해서는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선전을 일삼는다. 북한 정권은 세계사의 흐름과 민족적 염원을 묵살한 채 적반하장 과 기만전술의 체면에 빠져 시대착오적 광란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의 당사자로 동포와 유엔군 350여만 명의 희생과 한반도의 전면적 파괴를 초래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대미(對美) 승전을 강변하며 전체적 전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해 집요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선전해왔다. 그들은 ‘정전체제’가 한반도 불안정의 원인인양 선전함으로써 자신들의 세습전제, 선군병영체제, 대남혁명주의와 모험주의적 도발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정치회담(195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4자회담(1997-1999), 9·19공동성명(2005)에서의 ‘평화포럼’ 개최 주장에서 보듯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북한의 평화체제론 공세는 고도의 군사적, 정치적 기만전술이다. 첫째, 북한은 정전 이후 지속적인 대남 군사도발을 통해 ‘정전협정’ 자체의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해왔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은폐시키고 현상적 요소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다. 즉, 한반도의 군사적 분쟁의 지속성을 정전체제의 결함 때문으로 부각시키고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한 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고집해왔다. 이 또한 조약 당사자(Party)와 조약

서명자(Signatory)를 구분하지 않는 북한의 기만전술이다. 정전협정은 미국의 클라크 대장이 서명하였지만, 클라크는 미국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포함한 유엔군을 대표한 것이다. 한국의 일부 진보 학자, 운동권 인사들이 북·미평화협정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당사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 논리를 성찰 없이 답습한 결과이다.

셋째, 북한의 미국과의 평화협정론은 남한을 향한 군사적,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대남혁명전략과 통일전선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수단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키고 이는 한반도의 ‘자주’를 실현하는 것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북한의 자주 논리는 ‘민족대단결’이라는 정치구호로 연결되어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론’ 등 민족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선전으로 정치화되었다. 이 선전은 결국 민주화 이후 남한 내의 운동권을 배양하는 이데올로기로 확산되어 남남갈등을 구조화시켰다. 최근 공개된 10.4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이 북한의 평화공세는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스며들 정도로 구조화된 것이다. 이는 바로 북한 오랫동안 견지해온 남조선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론은 정전체제를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으로 호도(糊塗)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시킬 것이라는 환상을 부채질하고, 남한 내부의 대북 강경론자들의 이념적, 정치적 입장을 고립시키는 남남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남북한 관계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을 부채질하는 그래서 평화체제로 대체되어야 하는 ‘낡은 제도’가 아니다. 이 협정은 6·25라는 국제전적 내전의 참화를 중지시키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과 전면전의 확전을 막은 주요한 평화확보의 장치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대남 혁명노선, 통일전선전략,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북한의 정책에 있는 것이지 정전협정의 제도 때문이 아닌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서 우리와 우방국들이 재인식해야 하는 것은 평화협정의 구두선(口頭禪)이아니라 평화관리의 실효성인 것이다.

정전협정은 그 해에 결성된 한미동맹의 군사적·정치적 결속으로 전쟁억제라는 ‘소극적 평화’라도 지속하게 했다. 한편, 정전협정은 한반도 평화관리의 실효적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전적 과정을 보장하였다. 물론 북한은 평화와 민족의 환상을 부추기며 대남혁명노선을 견지했고 폐쇄와 전제, 모험주의에 경도되어 핵 무장 시도와 함께 고립과 위기에 빠져 ‘불량국가’로 전

락해 버렸다. 불량국가의 정정협정 무력화 정책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1992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정상국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있었던 것은 아니다. 냉전 종식, 중국 개방이라는 세계정치의 전환을 의식하여 북한은 남북한 동시유엔가입을 수용했고, 남북불가침협정 및 한반도비핵화 선언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18일 북한은 NPT탈퇴로 한반도의 핵 위기를 조장했고 제네바 협정(1994)의 미봉(彌縫), 6자회담의 지연전술을 통해 결국 3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모험주의의 길을 택해 버렸다. 핵무기의 소량화, 탄두화를 시험한 북한의 2·12 3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핵그늘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북한 자신의 정상국가화의 길을 단아버렸다. 북한의 핵국가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안보질서와 한반도 정전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더 이상 평화체제론의 선전조차 통할 수 없게 된 엄중하고 심대한 도발행위이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정전협정의 폐기를 선언한 것은 바로 평화체제론의 허구를 북한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3대 세습, 연평도 도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3차 핵실험의 감행으로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북한 핵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 보았으나 그 어떤 정책도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포용(engagement)정책을, 이명박 정부는 무시(neglect)정책을 써보았으나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다. 막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북한의 모험주의와 폐쇄정책의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UN의 대북제재, 미국과 중국, 한국의 북 핵 불용 공조가 개시되었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한반도의 실효적인 평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북한은 핵과 경제를 병진(並進)시키겠다는 기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발전시킬 여지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이거니와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까지도 북 핵 불용 기조를 철회할 수 없다. 핵을 고수하는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피해나갈 도리가 없고, 북한 경제는 외부적 도움 없는 한 발자국도 전진해나갈 수 없는 것이다. 북한 핵은 체제유지와 권력수호를 위해 추구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붕괴, 혹은 급변사태를 촉진하게 될 개연성이 커지는 것이다. 북한 핵의 존재로 한반도의 상황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향후 한반도 평화 확보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탈냉전질서가 도래하고 대북 햇볕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서도 한반도 질서의 점진적인 이행, 즉 연착륙의 가능성을 놓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의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의 핵선군정책, 김정은의 모험주의적 대남도발과 핵실험 감행은 한반도 평화의 점진적 제도화의 가능성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안이한 평화이행론에 빠져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도발에 의해 야기된 불안정한 평화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언제라도 밀어닥칠 수 있는 통일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실효적인 평화관리와 적극적인 통일대비 전략은 북한 핵무장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는 기왕의 ‘방어충분성’에 입각한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se)가 아니가 ‘공세적 방위’(offensive defense)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의 탄두화된 핵무기의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선제 및 예방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아울러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선제타격이 실패했을 경우의 요격(intercept) 능력까지 갖추는 공세적 방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대적인 군비증강, 핵무장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다.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적 대처능력을 전략적으로 입체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모험적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확장된 핵우산, 주일미군, 괌기지 등 한반도 유사시 지원전력과 한국의 군사력, 평택 미군기지의 전력을 동조화(synchronization)시키는 전략과 전술, 훈련과 기동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핵 비대칭 위협에 상응하는 한국과 미군의 비대칭 타격능력, 이는 북한의 중대 도발 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키는 ‘중심타격’ 전술도 기획되고 충분히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의 지휘부는 후세인의 말로가 어떠했던가를 적나라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도발은 권력계급과 군사지휘부의 절멸(絶滅)로 이어진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은 단순히 남한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는 수준을 넘는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1970년부터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주요 전승국의 핵균형이 아닌 군소국가, 특히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의 모험주의적 도발과 이에 따른 확산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주요 강대국의 세계질서 구상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UN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유보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핵비확산 질서는 주권평등

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제사회의 과두제적 질서(oligarchical order)의 불가피성과 국제평화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조치이므로 거의 모든 정상국가들이 핵비확산 레짐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조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닌 실체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다. 중국이 G2로 부상하려면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 못지않은 국제질서상의 지도력과 책임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는 G2로서의 국제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걸림돌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동맹을 이유로 북한을 마냥 두둔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핵비확산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정책협조가 필수적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정치적 동학(dynamics) 유연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발을 예방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용미(用美)·용중(用中)의 전략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실효적인 평화관리와 통일의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적인 통합과 결속이 필요하다. 민주화이후 한국 사회는 탈냉전 민주사회의 의사의 다양성 수준을 넘는 근본주의적 이념대립이 구조화되어 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의 남남갈등은 대북한 정책 선택 상의 (절차적) 경쟁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북한 전체주의적 전제정권에 대한 강경과 포용을 놓고 이념적 대결을 벌이는 우(愚)를 범했다. 1998년 이후 한국정치와 지식계의 이념구도는 전대미문의 북한 정권을 포용하자는 진보, 동포의 인권박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보수로 분화되어버렸고 양자 간에는 건전한 정책적 경쟁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강은 양면을 놓고 상대방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근본주의적 대립이 구조화 되었다. 퍼주기 논쟁, 대북 불법송금갈등, 최근의 NLL 발언문제 등등은 한국 정치세력과 지식계의 이념적 전도(顛倒)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국가적 일체성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북한의 핵무장 시도와 정상국가화의 거부에 기인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정치적, 이념적 대응의 분열상에 의해 더욱 심화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념적 대립의 극복과 정치적 통합, 국가적 일체성의 확보는 한반도 평화의 실효적 관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위기의 구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위기에 창조적으로 응전해야할 정치력의 부재인 것이다. 유기적인 국민통합, 건전한 정치경쟁 구도와 상생문화, 창조적인 지성이 응결되어야 평화관리와 통일준비의 전략적 힘이 배가되는 것이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치권과 지식계는 평화체제론의 환상을 벗어나 평화관리와 통일준비에 통합력과 창조력을 결집해나가야 할 것이다.